



대만의 사회적 경제정책: 청년-고용-지방이 연계된 비제도화 된 사회혁신*

윤대엽
대전대학교

발전국가의 제도유산과 인구축소, 지방소멸, 청년실업 등 사회구조적 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대만의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정책화 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청년실업, 지방창생, 사회혁신을 유연하게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만의 '비제도화 된 사회혁신' 정책을 이론적,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대만의 사회적 경제 육성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적인 함의를 가진다. 대만은 한국, 일본과 함께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발전국가의 제도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의 증가, 비대칭적 인구집중 및 지방소멸 역시 한국, 일본, 대만이 공유하고 있는 위기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이윤동기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 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대만의 사회적 경제정책은 관련 법제가 제도화되지 않은 '비제도적 사회혁신'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만의 경제구조가 '비제도적 사회적 경제'의 변수임을 설명하고 청년실업, 스타트업 등의 사회구조적인 위기극복에 미친 영향을 비교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주제어: 대만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혁신, 발전국가, 청년정책]

* 본 연구는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NRF-2020S1A5C2A03092778).

논문의 학문적, 정책적 보완을 위해 조언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I. 문제제기

사회적 목적의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개념과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2009년 채택된 'EU의 사회적 경제 결의문'은 각국이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수익성과 사회적 연대를 융합하는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본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통합을 강화한다. 둘째, 인권, 연대 등의 민주적인 가치와 사회자본을 생산함으로써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지속하는 기반이다(주성수, 2019: 20). 그러나, 각국이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개념, 정책, 제도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김종법, 2010). 이 때문에 2009년 EU의회는 사회적 경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치적, 입법적, 운용적 요건들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 핵심은 일반 기업의 경쟁규칙과 달리 독특한 가치와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법률적 기반을 제도화하는 것이다(주성수, 2019: 20). 2021년 EU는 사회적 경제 실행계획(EU Social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38가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European Commission, 2021). EU 회원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유발하는 고용효과는 0.6%-9.9%까지 상이한데, 사회적 경제의 확대, 육성하기 위한 공동의 정책, 제도, 금융기반 구축계획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경제의 다양성(varieties of social economy)을 고려하면 대만이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정책은 정책적, 비교적 사례를 제공한다. 2000년대를 전후로 사회적 경제는 동아시아 경제사회 정책의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일본사회에서 공공부문을 보완하여 비영리 기관의 역할이 법제화된 것은 1998년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제도화되면서다(Ishizuka, 2002). 일본 정부는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인구감소와 지역축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육성을 추진했다. 특히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는 지방창생을 목표로 지역재생-청년고용-인구유입 등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의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주도의 사회적 경제육성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추진된 것 역시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홍콩에서 사회적 기업이 제도화되고 정책화된 것은 홍콩반환 직후인 2000년 초반이다. 빈곤, 일자리, 노인,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는 가운데 홍콩정부는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조상미·김진숙, 2014: 296-297). 중국정부도 도농간, 지역간, 산업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이장원·전가림, 2014). 동아시아 각국과 비교하면 대만에서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이 공식화된 것은 비교적 늦은 2014년이다. 대만 행정원은 2014년 ‘사회적기업 실천계획(社會企業行動方案, 이하 사회적 기업정책)’을 발표하고 사회적 경제육성 정책을 공식 추진했다(經濟部, 2014). 그리고 2018년에는 ‘사회혁신실천계획(社會創新行動方案, 이하 사회혁신정책)’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되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이 2000년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정책은 구조적, 경험적 공통점이 있다. 우선 발전국가(the developmental state)의 경로적, 제도적 유산을 공유하는 국가라는 특징이 있다. 일본을 비롯해 한국, 대만, 홍콩 등은 모두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다. 정부는 기획합리성의 주체로서 전략산업의 육성목표를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과 정책기구를 동원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적 경제가 전통적 경제에서 정책적 차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사회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 역시 공통적이다.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가속화된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각국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산업구조 변동을 초래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지방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산업, 인구의 비대칭적 집중이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문제역시 한국, 일본, 대만의 사회구조적 공통점이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전통적인 공익단체, 비영리단체와 함께 이윤동기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대만의 사회적 경제정책은 개념, 정책은 물론 법제화에 있어서 상이하다. 일단 일본이나 한국보다 사회적 경제 육성문제의 정책화가 가장 늦었다. 마잉지우 정부 시기인 2014년 사회적 기

업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경제정책이 처음 도입되었다. 그리고 차이잉원 정부가 출범한 2016년 이후 사회적 경제육성 정책을 ‘사회혁신(社會創新)’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관련 법제를 제도화하지 않은 사회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국가 정책이념과 제도유산과 인구축소, 지방소멸, 청년실업 등 사회구조적 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대만의 사회적 경제는 어떤 비교적인 특징이 있는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포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사회적 경제정책이 포괄적인 사회혁신을 목표로 관련 법제를 제도화하지 않은 ‘비제도화된 사회혁신’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인 과제와 정치적인 계기가 대만에서 사회적 경제정책 이념과 정책이 본격화되는 요인이 되었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경로와 산업구조가 비제화 된 사회적 경제 정책의 변수임을 설명하고, 청년실업, 스타트업, 지방창생 등 사회구조적인 위기극복에 미친 정책적 함의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다양성을 발전국가 시각에서 개념화하고 비교적인 측면에서 접근시각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2014년 마잉지우(馬英九) 정부에서 추진된 사회적 경제정책의 배경과 세부적인 정책내용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사회혁신정책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된 사회적 경제정책의 정치 및 사회적 배경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만 사회적 경제의 정책이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하고 한국의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II. 사회적 경제의 다양성: 접근시각

사회적 목적의 사적 결사체(association)와 기관(organization)이 시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은 동아시아 전통경제에서도 새로운 쟁점은 아니다. 두레, 계, 향약 등은 모두 전통사회에서 공공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동아시아에서 사적 결사체로서 상호부조를 위한 전통적 기능이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화된 제도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19세기

중업 영국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을 수용하여 금융조합, 산업조합, 소비조합, 노동조합 등의 형태로 제도화했다. 1900년에 제정된 일본의 산업조합법은 동아시아에서 제도화된 최초의 협동조합법으로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협동조합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김이경, 2021: 106). 전후 한국, 일본, 대만에서 사회적 경제는 (1) 민간부문의 비정부기구(NPO)가, (2) 비영리 목적의 자율적 활동으로, (3) 공익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에서 정부의 관여에서 자유롭게 공공부문을 보완하여 빈곤, 아동, 복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한국의 경우 1961년 일본의 농업부문 협동조합을 모델로 제도화된 농촌부문의 사회적 경제조직(농협, 수협, 신협 등)은 일본과는 달리 정부주도의 하향식 사업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또, 일본과는 달리 경제사업과 금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했다.¹⁾

〈표 1〉 사회적 경제의 영역과 정책화의 다양성

구분	정부영역 (제1섹터)	제 4 섹터	사회적 경제 (제3섹터)	제 4 섹터	시장영역 (제3섹터)
주체	정부, 공공기관		NGO, (영리·비영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업, 기업재단
정책 수단	제도수단, 금융수단, 정책기구		비영리 공익활동 영리 공익활동		기부 사회적 책임(CSR)
자금	재정		기부금, 이윤(profit)		이윤(profit)
		민간주도 (느슨한 법적 기반)	정부주도 (구속적 법적 기반)		
NGO 모델		일본			
기업 모델		대만	한국		

자료: 저자작성

전통적 경제를 보완하여 사회적 경제를 확장한 것은 기업의 역할이다. 동아

1) 반대로 일본의 농협법은 조합원 및 회원을 위한 최대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2015년 아베 내각의 농협개혁에 따라 영리목적 사업제한 조항이 삭제되었음

시아 기업의 기부, 사회적 책임(CSR)활동은 1990년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상 서구사회의 사회적 책임은 (1) 주주모델(shareholder model)과 (2) 이해관계자 모델(stakeholder model), (3) 윤리적 모델(philanthropic model) 통해 설명되어 왔다. 주주모델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기업이 사회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에 이윤의 일부를 분담하는 원인이 주주 등 내부적인 압력에 있다고 설명한다. 1950년대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일반화되지 않은 것은 기업의 목적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주모델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사회적 목적활동의 목적은 마케팅, 홍보 등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해관계자 모델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활동 기반인 근로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포괄적인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정홍준 외, 2018: 11). 다국적 기업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활동이 확대된 것은 투자국의 사회적 요구와 압력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사회 통합 또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은 기업의 성장에 있어 사회적인 기반에 대한 인식이 기업의 사회 참여적 경영행태의 요인으로 설명한다(구정우·이수빈, 2015). 반면 윤리적, 규범적 시각은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에 있어 설립자 또는 경영인의 자발적인 동기가 작동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기업의 CSR은 흥미로운 경험적 사례를 제공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1990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된 것은 경제적 세계화, 정치적 민주화,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변화 때문이다. 특히 한국 대기업의 이익대비 기부금 비중은 이미 1980년대 서구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발전국가의 특성을 대변한다. 정부주도의 산업정책과 신용공급에 의해 성장한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기부금 부담이 높은 것은 정치적 요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2010년 기준 한국 500대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0.21%, 경상이익 대비 3.01%를 사회공헌비용으로 지출하는데 자사출연재단에 대한 기부액이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특징적이다(오덕교, 2012). 버블경제 붕괴로 장기침체가 시작된 1990년대 일본기업 역시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은혜를 갚는 행위 또는 정당성의 확보라는 윤리적, 시민적 규범이 작동했다(이상민, 2012). 상대적으로 대만기업의 CSR활동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낮았던 것은 가족경영 중심의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 구조요인 때문이다(Wu et al. 2012).

2000년을 전후로 동아시아에서 비영리단체 중심의 전통적 영역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적 경제는 소위 ‘제3섹터’로 확대되었다.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제3섹터 개념은 전통적인 공공부문(제1섹터)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제2섹터)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영역으로 국가, 시장 이외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사회적 목적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미국의 비영리조직(NPO) 또는 독립부분, 영국의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 프랑스의 연대경제 등은 사회적 목적의 공익을 추구하는 영리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김종범 2010). 최근에는 공공부문과 사회적 경제, 그리고 시장영역과 사회적 경제의 기능적, 정책적, 조직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제4섹터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김종범, 2021).

유럽과 미국의 개념을 수용하여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정책개념과 법적기반에는 <표 1>과 같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1) 사회적인 문제해결이 되는 공익성을 목표로, (2) 비즈니스 형태의 수익성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 해결 방식에 있어 혁신성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법적 형태를 포함한다. 일본에서는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법이 제정되어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NPO의 법적 기반이 제도화되었다. 아베 내각은 2015년 비영리활동으로 제한되었던 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영리목적의 사업제한 조항을 삭제했다(김두년, 2015). 일본이 전통적인 NPO와 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법적기반을 포괄적으로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2007년 정부주도의 법제화를 통해 공공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법제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마을기업육성시행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셜벤처(벤처기업육성법)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개별 법률에 의해 정의되어 있다(지광운, 2021).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관련 법제를 통합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 민간, 정부 간의 이견에 따라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강민수·윤모린, 2021).

사회적 경제의 주체와 법적, 정책적인 기반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 경제의 목적과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자율적인 결사체(association), NPO, 협동조합 등을 모델로 민간주도의 사회적 경제정책과 법적기반이 제도화되었다. 반면 한국은 발전국가적 사회적 경제 육성정책이 제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Liang, 2016). 정부가 사회적 경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고 사회적 기업의 요건, 목적, 기능과 보호 및 육성 방안을 구체적인 법률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NPO 중심의 일본, 정부주도의 한국과 비교하면 2014년 이후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혁신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독립적 법률이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목적의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혁신 등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창업, 금융지원, 고용확대 등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회적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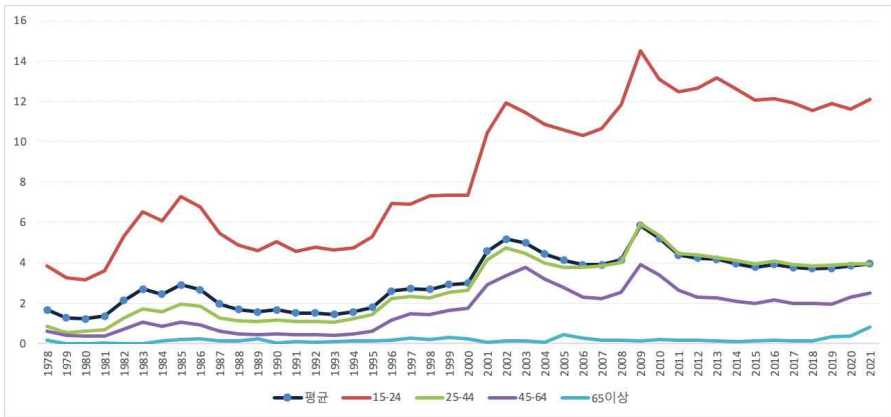
아래에서는 대만에서 사회적 경제가 정책화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역사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관련 정책이 청년실업, 창업, 지역창생 등의 과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대만에서 사회적 경제가 정책화 된 것은 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과제를 배경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마잉지우 정부가 2014년 처음 정책화한 ‘사회적 기업 실천계획’과 차이잉원(蔡英文) 출범 이후 2018년 추진하고 있는 ‘사회혁신실천계획’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회적 목적의 공익성보다 창업과 고용 등 시장성을 우선하는 대만의 경험이 정부주도의 법적기반에서 추진되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정책과 차별적 특성이 있는지 함의를 비교 분석한다.

Ⅲ. 마잉지우 정부의 사회적 경제정책

대만에서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이 공식 시작된 것은 2014년이다. 마잉지우 정부의 경‘사회적 기업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시작했다(經濟部, 2014). 사회적 기업계획은 사회적 경제가 식품, 의복, 복지, 교통, 교육 등의 사회적인 서비스는 물론 노인치료, 커뮤니티 구축, 환경보호, 취약계층의 취

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또는 영리조직으로 정의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는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제공되었지만 (1) 서구와 아시아 국가들이 사회적 경제육성을 추진하고, (2) 빈곤, 실업, 지역격차 등 대만사회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3) 컨설팅 서비스, 사회적 기업 벤처캐피탈, 마케팅, ICT등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597개의 NPO 중 지역경제 모델이 502개 (84.1%)로 가장 많고, 협동조합 모델 15개 (2.5%), 노동통합모델이 80개로 13.4%를 점유하고 있다(經濟部, 2014).

〈그림 1〉 대만의 연령대별 실업률, 1970-2021



자료: 대만국가개발위원회 통계자료

대만에서 2014년이 사회적 경제의 원년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2014년이 사회적 경제가 정책화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양안관계라는 정치적 요인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양안경제협력의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대만경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되었다. 1996년 대만 전체 수출(1,189억 달러)에서 중국 비중(220억 달러)은 18.5%였지만, 2010년 26.8%로 상승했고, 코로나-19 위기에 도 불구하고 25.8%를 차지했다. 자본과 기술의 비교우위를 가진 대만기업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산업공동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

다. 2003년 500억 달러를 넘어선 양안교역은 2006년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3년에는 다시 1,9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일본, 아세안을 제치고 대만의 최대 교역국가로 등장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구조적 실업과 산업 및 소득구조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지은주·이신화, 2014). 특히 대형 국영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안관계의 진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는 청년실업문제를 심화시켰다. 2009년 20-24세의 실업률은 14.67%, 25-29세 실업률은 8.7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았다.

계층간, 산업간,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당 마잉지우 정부가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 추진하자 대학생들이 입법위원을 점거하는 ‘해바라기운동(太陽花)’을 촉발시켰다. 2008년 총통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마잉지우 정부는 2010년 양안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해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ECFA)’을 체결했다. ECFA는 양안간의 상품, 서비스 무역개방과 투자를 보장하는 협정으로 총통선거 과정에서도 논쟁의 대상이었다. 민진당은 ECFA가 대만경제를 중국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경제협력이 주권문제로 정치화되지 않았다(문명기 2012). 그런데 서비스무역협정이 양안관계를 거부하는 해바라기 운동을 촉발시킨 것은 양안간의 경제관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산업구조와 노동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정치화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양안교역에 따라 대만의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변화되었다. 대만의 산업구조는 대규모의 국영기업과 민영 중소기업으로 구조화되었다(윤대엽, 2016). 국민당이 통치기반으로서 핵심 산업을 국영기업으로 운영하면서 다수의 본성인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결과다. 대만경제가 세계화되고 양안관계가 심화되면서 대형 국영기업과 함께 민영 대기업이 구조화되었다(김민환·정현욱, 2014: 20-21). 대만의 산업구조가 수직적인 계열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이 때문에 실업과 비정규직의 확대 문제가 심화되었다. ‘22,000 세대(22K)’라는 대만 청년세대의 자조적인 비판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다. 산업간,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이 양간간의 독립과 협력이라는 정치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마잉지우 정부의 사회적 기업계획은 해바라기 운동이 종결된 이후 5개월 만인 9월 4일 발표되었다. 사회적 기업정책 핵심 목표는 사회적 기업(SE)의 기업

가 정신, 성장, 발전이 되는 생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16,120만 대만달러의 예산 투자계획도 구체화되었다. 마이잉주 정부가 사회적 경제육성을 위한 정책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회적 기업정책은 크게 법적기반, 행정기반(사회적 경제 플랫폼), 금융기반, 교육기반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1) 법적기반은 사회적 경제의 법 적환경을 구축하고 기존 법률 및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2) 행정기반은 사 회적 경제의 육성,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 이념 홍보, 정책 플랫폼 구축, 공공부문의 사회적 경제수요 평가 및 실행, 국제교류 등 을 활성화하는 지원정책이 포함되었다. (3) 금융기반은 사회적 경제관련 조직, 기관에 신용을 공급하는 지원정책이다. 벤처투자, 엔젤투자 등을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한 사회적 경제육성 방안이 포함되 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지원과 함께 민간부문의 기부, 투자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4)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대학, 민간기업이 사 회적 기업의 창업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표 2> 사회적 기업 실천계획 세부 추진방안

구분	세부정책	주관	협력
법적 기반	SE의 법 적환경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기존 법률 및 규정의 재검토	경제부	보건복지부, 경제부, 재정부, 재단법인주관기관
행정 기반	공공 및 민간부문 광고, SE벤처마크	노동부	경제부, 노동부
	SE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구축		경제부, 노동부
	SE 안내시스템 및 원스톱 창구 구축		경제부, 노동부, 위생복지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SE수요 예비평가		위생복지부, 농업위원회
	SE국제포럼 및 교류활동 촉진		노동부
금융 기반	벤처투자 및 엔젤투자 등 자금조달 지원	경제부	경제부, 노동부, 국가발전위
	CSR 기업의 SE투자 지원		경제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의 SE 신용보증사업		경제부
	SE 홍보채널 확대 및 대중참여 독려		금융감독위원회
교육 기반	기존 교육체계 SE 교육 추가	경제부	경제부
	대학의 창업교육에 SE 인재육성 지원		경제부, 노동부, 교육부
	민간기업과 창업센터의 SE지도체계 구축		경제부, 노동부
	대학, 공공기관에 SE 인규비이션 센터 구축		교육부, 교통부

자료: 經濟部(2014), “社會企業行動方案” p. 17.

경제부, 노동부, 위생복지부 등 사회적 경제정책의 주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의 세부 예산과 정책내용은 사회적 경제정책의 특징을 대변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사회적 경제정책 예산으로 편성된 16,120만 달러의 예산은 경제부 4,600만 달러, 노동부 11,000만 달러, 기타예산 520만 달러 등으로 배분되었다. 사회적 경제정책의 예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노동부 소관 예산이 10,500 달러로 전체 예산의 67.2%를 차지한다. 이는 마잉지우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경제정책이 고용정책에 중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법률, 행정, 금융, 교육 등의 정책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은 행정기반 등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관련 예산으로 전체의 49.6%가 배정되었다. 그리고 공공부문, 대학교육, 민간기업의 사회적 기업 교육 및 창업관련 체계구축에 37.7%가 배정되었다.

셋째, 사회적 경제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간접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경제적 목적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은 직접수단과 간접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전영한·이경희, 2010). 규제, 신용, 보조금, 정책기구를 통한 행정 집행 등은 직접수단이다. 반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교류, 홍보 등의 정책수단은 간접수단이다.²⁾ 다만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경제정책의 경우 직접수단 보다는 교육, 홍보, 창업지원 등 역량형성을 위한 간접적인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규제, 신용 등 직접적인 수단의 정책비중은 매우 낮으며, 한국과는 달리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기구도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다. 민간부분이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영역도 포괄적으로 정의되었다. 통상 좁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은 정관에 사회복지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의 최소 30%를 사회목적으로 유보하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수익활동의 일부를 사회적 목적에 투자하고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영리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폭넓게 사회적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2) 물론 직접 또는 간접수단이 정책결과에 미치는 성격은 명령, 강제, 유도, 설득 등 다양하며, 직접수단이 명령, 강제 등의 정책성과를 목표로 한다면 간접수단은 유도, 설득 및 역량형성 등의 정책결과와 연계될 수 있다.

〈표 3〉 사회적 기업 실천계획 세부예산

구분		세부정책	예산(만 TWD)	
법적 기반	경제부	사회적 경제 규제조정	1,000	1,000 (6.4%)
행정 기반	경제부	사회적 기업 홍보, 산학연 세미나, 멘토링	1,050	7,750 (49.6%)
	노동부	사회적 기업 홍보, 강의, 정보, 국제교류 등	6,300	
	위생복지부	사회적 기업의 수요-공급 촉진 세미나	400	
금융 기반	경제부	사회적 기업 신용보증	950	1,070 (6.9%)
	위생복지부	사회복지관련재단의 사회적 기업 투자 촉진	120	
교육 기반	경제부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 체계 구축	1,600	5,800 (37.1%)
	노동부	상담, 교육훈련 및 워크숍	4,200	

자료: 經濟部(2014), “社會企業行動方案” pp. 18-20.

영리단체, NPO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적 기업 실천계획은 (1)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구축, (2) 사회적 기업 경영체질 강화, (3)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세가지 목표를 정책목표로 수립했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 정책, 금융정책기반을 지원한다. 영리기업 및 NPO가 사회적 목적의 경영활동을 확대하는데 있어 규제를 축소하고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환경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이해확산을 위해 대학강연, 사회적 기업행사를 주관하고, 사회적 목적의 기업활동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공한다. 또, 사회적 기업을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의 복합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는 창업, 금융, 성과홍보 등의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모델에 대한 컨설팅, 상담, 전문교육과정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식품, 의류, 주택, 교통, 문화, 교육 등에서 사회적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IV. 차이잉원 정부의 사회혁신실천계획

2016년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차이잉원 정부는 2018년 7월 '사회혁신실천계획(社會創新行動方案)'으로 명칭을 바꾼 사회적 경제육성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출범한 차이잉원 정부가 기존 사회적 기업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2018년 사회혁신으로 명칭을 바꾸어 추진한 것은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江明修·張浩榕, 2020). 2016년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한 차이잉원 정부 출범 2년차인 2018년 11월, 지역단위 자치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적이 약세에 있었다.³⁾ 차이잉원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본성인과 민진당의 정치적 정체성을 계승했지만, 양안관계에 의존하는 대만경제에는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중국인의 대만방문이 축소되면서 대만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민진당의 정치기반이었던 카오슝에서 조차 국민당 후보인 한귀위(韓國瑜)가 정치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개 안의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되었다. 동경올림픽에서 국명으로 대만을 사용하는 정명(正名)문제, 원자력발전, 동성결혼, 환경보호 등의 쟁점이 포함되었다(지은주, 2019).

3) 2018년 지방선거는 집권당인 민진당의 대참패로 끝났다. 자치정부 선거결과 뿐만 아니라 동경 올림픽의 정명참여가 부결되고 원자력 발전시설 재개가 통과되면서 민진당의 핵심 정책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 (지은주 2019)

〈표 4〉 2012년 이후 대만 선거결과



선거 구분		민진당	국민당	기타
2012년	총통	45.63%	51.60%	2.77%
2016년	총통	56.12%	31.04%	12.84%
2016년	입법원 ⁴⁾	68석	35석	8석

경제, 빈곤, 지역발전과 함께 환경, 주권 등이 선거이슈로 다루어지는 가운데 차이잉원 정부는 출범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마잉지우 총통과 차이잉원 후보가 출마하여 경쟁했던 2012년 총통선거에서 6%의 득표율 차이로 패배했던 민진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21개 현·시장 선거에서 13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했다. 전체 투표에서 47.9%를 득표해 40.81%를 득표한 국민당에 큰 차이로 승리했다. 그리고 2016년 총통선거에서 56.1%를 득표한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31.0%를 득표한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총통에 당선되었다. 2014년 이후 민진당이 선거에서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바라기 운동으로 양안관계, 특히 양안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이 초래하는 청년실업 문제가 정치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정치지형은 변화되었다. 마잉지우 정부와 국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은 모두 경제문제였다. 2010년 10.25%였던 GDP 성장률은 2011년 3.67%, 2012년 2.22%로 하락한데 이어 2015년에는

4) 입법원 총의석은113석임

1.47%로 축소되었다. 차이잉원 정부는 경제혁신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다(하영애, 2016). (1) 증세와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2) 전략적인 신산업 육성, (3) 중국의존도를 축소하는 대신 아세안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新南向政策) 등이다. 취임 이후 양안관계가 악화되고 대만입국 중국인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은 2016년 2.17%, 2017년 3.31% 수준에 그쳤다. 청년실업과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도 개선되지 못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가 악화되자 차이잉원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국한되었던 기존 정책을 사회혁신으로 변경하여 추진했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한 사회혁신 정책은 정책목표, 정책이념, 정책수단에 있어서 특징적이다.

첫째, 사회적 경제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마잉지우 정부가 처음 정책화한 '사회적 기업' 정책을 '사회혁신'으로 변경했다. 사회혁신정책의 추진배경으로 국내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고용, 분배 등의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목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포용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 규범이 사회혁신의 정책목표로 제시된 것은 중국과 차별화된 국가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안의존의 탈피를 추진하는 차이잉원 정부는 대만의 국가성, 정체성을 국제사회와 연계하는 사회혁신을 정책이념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 대상이 된 10개 국민투표 의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목표에는 빈곤, 기아, 건강과 복지, 교육, 에너지, 산업과 기술혁신 등의 포괄적인 사회적인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혁신 개념으로 정의했다. 사회적 기업개념은 영리활동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반면, 사회혁신은 다원적이며 기술, 자원, 커뮤니티 협력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혁신정책은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적인 적용을 통해 다양한 그룹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술, 창업은 물론 지역소멸,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사회혁신을 포괄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Executive Yuan, 2018: 15-16). 사

회혁신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혁신을 통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만의 독특한 사회적 경제 육성전략의 성격을 대변한다.

셋째, 사회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가치, 자금, 교류, 규제, 지원, 국제협력 등 6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가치배양은 사회혁신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차원의 교육, 협동조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2) 자금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또는 중소기업 금융을 통해 사회혁신 기업의 투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대학을 연계하여 비즈니스 컨설팅 및 혁신기업의 창업, 지역사회혁신 모델을 육성하도록 지원한다. (4) 규제조정은 사회혁신의 법적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기업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부처, 위원회에서 규제조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5) 그리고 공공조달은 물론 민간부문에서 사회혁신 기업과 서비스를 적극 구매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적화한다. (6) 마지막으로 식품안전,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NGO 차원의 초국가적 협력과 사회혁신관련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다. 5년간 사회혁신정책 예산으로 88억 대만달러(약 3,400억 원)가 책정되었다.⁵⁾

〈표 5〉 사회혁신실천계획 세부 전략

구분	세부정책
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현안 해결 매년 2,500명 학생 참여 (교육부) ■ 최소 70개의 벤처팀 지원, 60% 기업설립 지원(교육부) ■ 사회단체 관련 350명 교육, 역량강화 (내무부) ■ 25개 협동조합 관련 활동 조직, 750명 참가 (내무부) ■ 사회혁신인식 80% 제고 (경제부)
신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 기업가 2억 대만달러 (원주민협의회) ■ 20개 원주민 스타트업 기업 1백만 대만달러 지원(원주민협의회) ■ 100개 원주민기업 육성 및 판매 (원주민협의회) ■ 민간기업 CSR 사회혁신 투자 (금융감독위원회) ■ 사회혁신상품 투자 연계 8천만 대만달러 이상 (경제부) ■ 10개 사회혁신기업과 CSR연계 (경제부) ■ 7개 이상 중소기업 공동창업동맹 구축(경제부) ■ 사회적 기업에 운전자금 및 네트워크 지원 (국가발전기금, NDF)

5) 세부적으로 2018년 148,900만 TWD, 2019년 167,500만 TWD, 2020년 197,800만 TWD, 2021년 191,800만 TWD, 2022년 182,800만 TWD이다 (Executive Yuan 2018, 25).

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 청년 개발 프로그램 추진 (문화부) ■ 100개 지역에 사회혁신협력 10개 모범사례 제공(경제부) ■ 사회혁신관련 소셜 네트워크 연계 (경제부) ■ 사회혁신기업 등록/진입 체계 확립 (경제부) ■ 사회혁신 실증규정 6개(매년) 제공 (경제부) ■ 20개 이상 농촌기업 발전 지도 (농업협의회) ■ 원주민 문화창의 산업 인재 지도(원주민협의회) ■ 원주민 첨단디자인 및 창작 지원(원주민 협의회)
육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자기진단 및 사회적 영향평가 도구 개발(위생복지부) ■ 10개소 이상의 사회혁신 랩(Lab) 신설 (경제부) ■ 70건 이상의 사회혁신 관련 홍보 (경제부) ■ 사회혁신구매 촉진을 위한 사업(Buying Power) 조직(경제부) ■ 사회혁신모델을 통해 1,000명의 장애인 고용기회 제공(노동부) ■ 사회혁신교육과정 및 125 프로젝트 관리자 교육 (노동부)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관련 법률 및 규정 완화 지원 (법무부)
국제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개발 웹 포털 (노동부) ■ 사회혁신 국제행사 개최 (경제부) ■ 사회혁신 국제활동 참여 (경제부)

자료: 行政院 (2018), “社會創新行動方案”, pp. 16-17.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한 사회혁신정책의 세부적인 정책은 <표 5>에서 요약하고 있다. 마잉지우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기업정책과 비교되는 정책적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혁신정책에서 고용창출 비중보다 교육, 창업 등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다. 마잉지우 정부시기 추진한 사회적 기업정책의 경우 노동부문의 비중이 67%였지만, 사회혁신정책에서는 고용보다 교육, 신용, 창업 등의 정책이 대폭 증가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정책은 사회혁신의 육성 및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과 사회혁신과정 교육프로그램이다. 대신 사회혁신정책의 핵심목표가 고용에서 창업, 청년, 지역창생으로 전환되었다. 6가지 정책영역 중 직접수단을 통한 사회적 경제육성 정책은 신용지원과 혁신지원, 육성확대 3가지 부문이다. 혁신지원 부문의 경우 청년개발, 사회혁신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의 등록 및 진입체계 구축 등의 사업은 경제부소관사업으로 분류되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민간기업 CSR연계, 신용지원도 경제부가 주관한다. 그리고 사회혁신 랩(lab)의 설치나, 상품구매, 사회혁신 관련 홍보도 경제부의 소관업무로 규정되었다. 이는 사회적 목적을 강조했던 이전 사회

적 경제정책과 비교하여 사회혁신정책이 포괄적 목적의 창업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혁신정책을 경제부, 특히 중소기업처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江明修·張浩榕, 2020)

둘째,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교육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6> 주관부처별 사회혁신정책 예산은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한 사회혁신정책의 특징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5년간 사회혁신정책 예산 중 57.4%의 예산은 교육부에 배정되었다. 교육부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실천과 U-Start 혁신창업 부분의 교육을 주관한다. 세부적으로 지역기반 대학이 지방정부, 산업자원을 결합하여 커뮤니티 차원의 혁신 및 개발을 사회혁신과 연계하는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지역돌봄, 산업기반, 지속가능 환경, 식품안전, 장기돌봄 등 5가지 주요문제에 관해 교육과제를 제안하도록 했는데 2018년 116개 대학에 220개 계획이 승인되었다. 2019년 지역문제에 관한 공동해결을 위한 사업에 150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5년 동안 500건 이상, 20,000명 이상의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U-start 계획은 문화부문 창업, 서비스업, 제조업, 사회적 기업 등의 4 부분에 대해 대학에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학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지원이 결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50만 위안을 지원한다, 창업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교육부, 노동부에 이어 전체 예산의 10.5%로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은 원주민위원회를 주관부처로 하는 원주민지원사업이다. 대만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격차,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역창생국가전략계획(地方創生國家戰略計畫)’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추진한 지방창생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대만의 경우 서부도시지역의 격차보다 동서간, 민족간의 격차가 큰 특징이 있다. 원주민족위원회가 원주민의 교육, 창업, 보육 등의 지원을 사회혁신정책에 포함한 것은 청년-창업-지방을 연계한 사회혁신정책의 특징이다.

〈표 6〉 주관부처 별 사회혁신실천계획 5개년

구분	세부정책	예산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사회적 책임실천계획 추진 • U-start 혁신창업계획 	507,249 (57.4%)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적인 취업증가 계획 • 사회적 기업세계포럼 참여 및 사회경제포털 운영 	175,350 (19.8%)
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 커뮤니티 건설, 청년문화마을 건설 	7,500
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혁신기업지원 플랫폼 • 기술사회혁신추진 가치배증 사업 	50,435 (5.7%)
내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단체 및 협력기업인 교육훈련 계획 	675
농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동체 기업경영 코칭 프로그램 	15,000
위생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친화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958
원주민족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종합개발기금 대출사업 • 원주민산업혁신가치 계획 • 화동종합개발계획 	92,712 (10.5%)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혁신과사회실천계획 	33,800 (3.8%)
합계		883,679

자료: 行政院 (2018), “社會創新行動方案”, pp. 19-33.

세 번째 특징은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도화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되어왔다. 2014년 사회적 경제정책이 본격화 된 이후 공공부분, 시장부문 및 전통적 비영리단체 이외 사회적 목적의 영리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의 주체로서 증가했다. 2013년 사회적 기업정책이 추진되기 직전 사회적 목적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NPO는 모두 597개였지만, 2017년 사회적 기업 384개, 협동조합, 지방개발조합 등 잠재적인 사회적 기업이 11,343개로 증가했다 (Wu et al., 2018: 10). 그러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서 비영리목적의 단체나 민간기업과 차별화되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진출과 창업을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詹昭全, 2020).

대만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논의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2003년 민간부문의 제안으로 ‘사회기업공사법(社會企業公司法)’ 초안이 작성되었고, 이후

‘공익공사법(公益公司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4년 왕위민(王育敏) 등 24명의 의원이 공익공사법초안을 입안했다. 그러나 2014년 사회적 기업정책이 추진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 ‘선 행정, 후 입법’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류되었다 (蔡志揚, 2015; 丘昌泰·劉宜君, 2017: 41-42). 2017년 입법원 제9기 제13차회의에는 위완루(余宛如) 등 31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발전조례초안(社會企業發展條例草案, 이하 사회적기업법)’이 발의되었다. 사회적기업법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다양한 유형의 영리 및 비영리 법인을 수용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法律網, 2017). 총4장 14조로 구성된 법안은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2) 주관기관, (3) 지원정책, (4) 금융지원, (5) 인재양성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2조에서 정의된 사회적 기업은 조직등록을 마친 조직으로 사회적 목적을 명시하고, 운영이익의 최소 50%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며, 연간수입의 최소 50%가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서 발생해야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사회적 기업정책의 주관기관은 국가발전위원회로, 사회적 기업발전계획, 사회적 기업의 등록 및 폐지, 예산과 사업추진을 주관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발전을 위해 신용지원, 사회적인 인식제고 및 구매촉진, 연구 및 교류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사회적 경제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법제관련 입법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선 행정, 후 입법이라는 판단이다. 입법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관련 법제가 부재한 것이 적극적인 보호나 유도를 제한하지만, 반대로 제도화는 사회적 경제의 유연한 발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입법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丘昌泰·劉宜君, 2017: 42). 둘째,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고려할 때 회사법을 적용할지, 공익단체법을 적용할지, 제3의 영역에 대한 지원과 보호, 규제를 신설할지 입법논의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공익자본 유치가 어렵고, 재무적 수익을 제한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영역에 대한 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 셋째, 주무기관의 이해관계도 반영되어 있다. 2014년 사회적 기업정책의 주무부처는 노동부였지만, 2018년 사회혁신정책은 경제부 중소기업처가 주관했다. 하지만 실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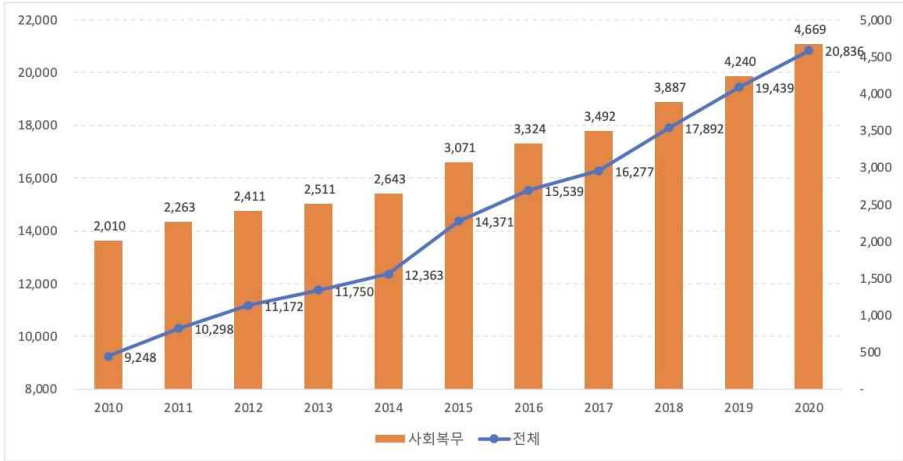
과 예산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2017년 제안된 사회적기업발전조례는 국가발전위원회를 주관부서로 지정한바 있다. 2018년 사회혁신정책의 경우 부처간협력기구(跨部會工作平台)를 설치하고, 경제부를 주관단위, 각 부처를 협조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V. 사회적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2014년 정책화되어 추진되기 시작한 대만의 사회적 경제정책은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인 성과를 만들었는가?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치화되어 정책으로 추진된 기간이 길지 않고,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청년, 고용, 지역 및 창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특히, 영리기업, 비영리기업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사회혁신’으로 규정하는 차이잉원 정부의 사회적 경제정책의 성과를 기존 기업정책, 사회정책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사회적 경제정책이 추진된 2014년 이후 창업,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부문의 금융지원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정책성과를 평가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가장먼저 사회적 경제정책이 추진된 2014년 이후 대만의 시민단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11,750개였던 중앙소관 시민단체는 2020년 20,836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시민단체 증가율이 8.6%인 반면 같은 기간 (2014-2020) 사회복지 및 봉사단체는 2,643개에서 4,669개로 연평균 9.3%나 증가했다. 지방소관 시민단체의 경우 2013년 30,930개에서 2020년 38,947개로 25.9%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및 봉사단체는 10,935개에서 13,721개로 25.4% 증가했다. 2014년 본격 추진된 사회적 경제정책이 사회적 목적의 비영리 시민단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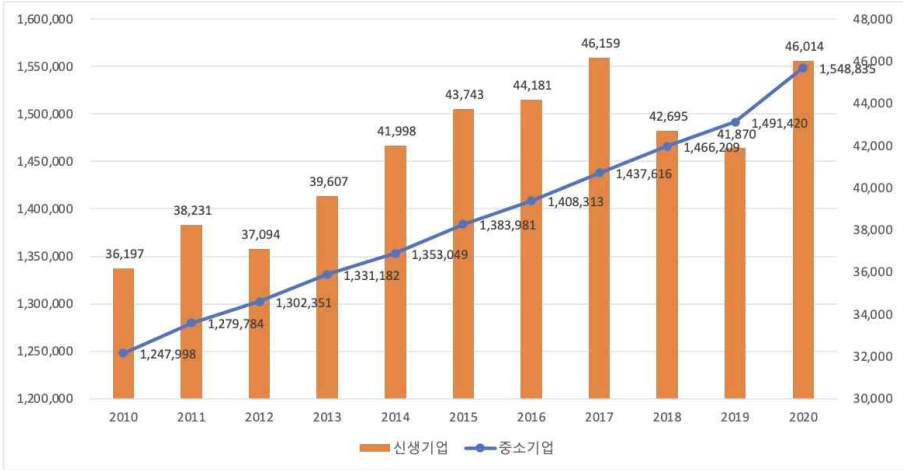
〈그림 2〉 대만의 시민단체(좌) 및 사회복지부봉사단체(우), 2020-2020



자료: 內政部 『內政統計年報』 pp. 123-125.

둘째, 사회적 기업 및 사회혁신 정책 이후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변화는 아래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다. 영리목적의 사회공헌, 영리목적의 사회적 기업은 물론 사회적 목적의 비영리 단체를 모두 사회적 경제영역에 포함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창업현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사회적 기업 또는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사회혁신 정책이 가진 창업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체 중소기업은 매년 평균 2.2%씩 증가했다. 이는 매년 3-4만여 개의 신생기업이 창업되었기 때문이다. 대만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인 것을 감안할 때 창업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2010-2013년 평균 창업기업의 수가 37,782개였지만 2014-2020년 사이 43,809개의 기업이 신규로 설립되었다. 사회혁신 정책이 창업 및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인과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 대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증가, 2010-2020



경제부 통계처, 『중화민국 통계연보 2020』 pp. 123-125.

흥미로운 비교사례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혁신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협동조합에는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4,348개였던 대만의 협동조합은 2019년 4,348개에서 2019년에는 3,891개로 감소했다. 농업부문 및 공업부문 등 생산관련 협동조합이 큰 변화가 없는 대신 소비협동조합, 특히 교내 소비협동조합과 국영협동조합이 감소한 것은 영리목적의 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7〉 대만의 협동조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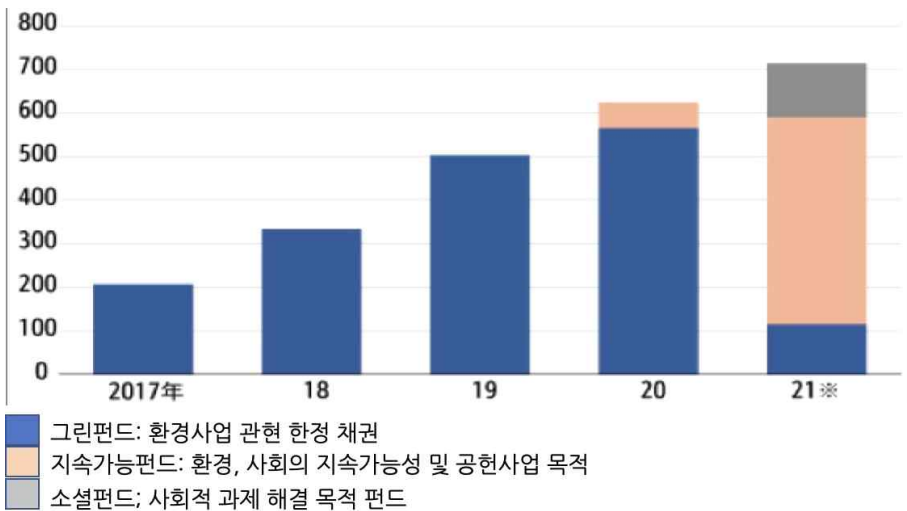
구분	농업협동조합	공업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기타	합계
2015	1,106	503	2,050	689	4,348
2018	1,151	491	1,728	658	4,028
2019	1,161	504	1,562	664	3,891

자료: The Cooperative League of the ROC, Cooperative Enterprise Yearbook 각 년도 참조

사회적 목적의 펀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SDGs)관련 펀드발행액은 2017년 200억 대만달러에서 2019년 500억 대만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에는 지속가능펀드 및 소셜펀드를

포함하여 700억 대만달러가 발행되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펀드 발행액의 증가는 1차적으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SDGs관련 펀드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은 경우 고용, 구매 등과 연계된다. 반대로, SDGs를 경시하는 기업의 경우 불매운동이나 사회적인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의 채권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신용조달은 물론 사회적 소비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대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펀드 발행현황(억 대만달러)



자료: <https://www.nna.jp/news/show/2217042> (검색일: 2022.06.07.)

VI. 결론 및 정책적인 함의

이윤적 동기와 사회적 목적을 통합한 사회적 경제는 세계 각국에서 공공부문을 대체 또는 보완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생산, 고용,

유통, 의료, 교육 등의 시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의 수단이 될 수 있다(윤대엽 2021).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된 정책이 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의 보호, 육성, 규제를 위한 정책수단, 법적기반, 정부역할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비교적인 차이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주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발전국가적 경로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의 사회적 경제육성을 위한 정책수단과 법적기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정책목표, 신용공급, 규제 및 보호 등의 사회적 경제관련 구속적인 법적기반을 제도화하고 정부주도의 사회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협동조합 이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 경제정책을 통해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 경제에 관한 법적기반이 제도화되었지만 협동조합 등의 전통적인 결사체 및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정책화된 대만의 사회적 경제정책은 (1)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중심으로, (2) 정책기구나 법적기반이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마잉지우 정부 시기 추진된 사회적 기업정책은 노동부의 정책비중이 높은 고용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혁신정책은 경제부, 특히 중소기업처를 주관기관으로 창업, 지역,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신용지원, 규제수단 등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대학 및 지역차원의 창업교육, 사회적인 인식제고 등 간접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만의 사회적 경제정책이 제공하는 비교적인 함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포괄적이고 초경계적인(trans-boundary)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전통적인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사이에 존재하는 영리목적의 비영리조직,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신용공급, 설립목적, 운영형태 등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의 스펙트럼은 더욱 확장된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는 경제부문간의 중첩(functional layering)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영리부문, 기업부분의 초영역적으로 중첩하는 제4섹터도 존재한다 (김종법 2021). 사회적 경제가 공공영역과 시장영역과 다른 경쟁원칙을 가져야한다는 이유 때문에 보호와 육성 목적의 인증 메커니즘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인증이 감시와 통제, 배타적인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목적의 영리기관의 경우 영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진입을 제한할 수 있고, 인증을 수단으로 보호와 규제의 이익을 독점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의 인증이 공공부문과 기업부분의 자유로운 융합과 협력을 통해 창출되는 제4섹터로의 확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고용-지역의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정책이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 또는 비영리단체가 주도했던 사회공헌 활동과 차별화되는 사회적 경제의 특징은 영리를 통해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목적과 영리적 목적은 상호 대항적인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는 경우 창업과 고용이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영리목적 을 강조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제도화하지 않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기업정책을 통해 다양한 주체와 조직이 사회적 목적의 영리활동을 병행하는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중소기업의 창업에 있어서 한국보다 경쟁력 있는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정책이 처음 추진된 2014년 이후 신규창업 기업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셋째, 대만의 사회적 경제정책이 공급주도 성장보다 수요주도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성장은 공급자의 공급확대, 또는 소비자의 수요증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역시 사회적 기업의 증가를 통해 성장하거나, 반대로 사회적 기업의 수요확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보호, 육성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공급주도의 사회적 경제정책이라면, 윤리적, 사회적 소비 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부, 참여 등이 수요중심 사회적 경제정책이다. 대만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등록, 보호, 경쟁규제를 통해 육성하는 것이 아닌 홍보, 교육, 마케팅 등 사회적인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

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혁신정책의 경우 전체 예산의 57%가 대학이 주관하는 창업교육 및 사회적 책임 교육부문에 배정되었다. 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인식, 홍보 등을 위한 활동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보호와 육성차원이 아니라, 마크를 발행하여 사회적인 아이덴티티를 부여함으로써 윤리적인 소비를 장려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 의료, 취약계층 고용, 환경, 지역혁신 등 사회적 경제가 목표로하는 영역은 많은 부분 이윤에 의한 자기조직화의 동기가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기업의 창업이 아닌 사회적인 인식, 소비와 참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윤리적, 사회적 소비를 위한 수요주도의 사회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 역시 사회적 경제육성을 위한 과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인식의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수·윤모린. 2021. 한국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쟁점 연구. 「시민사회와 NGO」 19(1), 129-166.
- 구정우·이수빈. 2015. 기업시민성과 세제시민성: 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구에 적극적인가?. 「한국사회학」 49(4), 165-198.
- 김성식·이영면. 2017.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현황과 과제. 「중소기업연구」 39(2), 109-137.
- 김이경. 2021. 한국·일본의 협동조합 유입·적용 경로의 비교를 통한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 전개의 특징. 「한국협동조합연구」 39(1), 103-130.
- 김종범. 2010. 유럽의 사회적 기업: 성과와 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28(1), 239-262
- 김종범. 2021. 축소사회 위기 해결을 위한 제4섹터 활성화 방안 연구. 「시민사회와 NGO」 19(1), 75-102.

- 문명기. 2012. 「양안관계, 제3의 모델은 없는가: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과 역사적 전망」. 최원식·백영서 역음, 『대만을 보는 눈: 한국-대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 서울: 창비, 100-116.
- 오승렬. 2017. 대만경제 중국의존 현상의 경제적 요인 및 함의. 「중소연구」 41(2), 225-262.
- 윤대엽. 2016. 대일 경제정책의 사회적 형성: 무역불균형과 한국과 대만의 정책 대응 비교. 「동아연구」 35(1), 109-150.
- 윤대엽. 2021. 「농지소유의 정치, 반공유재의 비극과 농촌소멸의 정치경제: 사회적 기업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021년 지방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21년 11월 26일, 충남대학교.
- 이승신 외. 2016.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1-16.
- 이장원·전가림. 2014. 중국 사회적 경제의 민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11(2), 103-121.
- 장은정. 2015. 대만 중소기업 청년창업지원 법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6(1), 337-369.
- 하영애. 2016. 2016년 대만 총통선거와 정책이슈. 「세계지역연구논총」 34(2), 33-58.
- 전영한·이경희. 2010.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총」 48(2), 91-118.
- 조상미·김진숙. 2014. 일본, 홍콩, 한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2), 287-317.
- 지광운. 2021. 사회적기업 활동화를 위한 법적정책 과제. 「법과정책연구」 21(4), 285-317.
- 지은주. 2019. 2018년 대만의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분석. 「국제·지역연구」 28(1), 121-153.
- 지은주·이신화. 2014. 세계화, 자유화와 대만의 소득 불평등: 경제, 정치, 사회적 원인. 「평화연구」 22(1), 131-165.
- Cortes, Andres Felipe and Younggeun Lee. 2021. "Social Entrepreneurship in

- SMEs: A Note on Three Essential Questions.” *New England Journal of Entrepreneurship* 24(2), 62-78.
- European Commission. 2021. *Building an Economy that Works for People: An Action Plan for the Social Economy*. <https://www.google.com/search?client=safari&rls=en&q=Building+an+Economy+that+Works+for+People%3A+An+Action+Plan+for+the+Social+Economy&ie=UTF-8&oe=UTF-8> (검색일: 2022.09.10.).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1. *2021 Global Report*. London: *The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 Hsu, Jui-Ling and Meng-Cheng Cheng. 2011. “What Prompt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Engage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Study from Taiw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19(5): 288-305.
- Ishizuka, Hideo. 2002. “The Social Economy Sector in Japan.”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73(2): 241-267.
- Seuring, Stefan and Sadaat Ali Yawar. 2015. “Management of Social Issues in Supply Chains: A Literature Review Exploring Social Issues, Actions and Performance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DOI 10.1007/s10551-015-2719-9
- Startup Island Taiwan. 2021. *2021 Taiwan Startup Investment Scene Report: Latest Trends of Early Stage Startup Investment in Taiwan*.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4fda45ae4b056e88666306d/t/627b66663323481e7ee9bf9f/1652254329458/2021+Taiwan+Startup+Investment+Scene+Report.pdf> (검색일: 2022.09.10.).
- Wu, Shihwei, Fengyi Lin and Chiaming Wu. 2012. “A Study on Taiwane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Ownership Structure.”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9(3): 111-122.
- Wu, Yung Chang, Yenchun Wu, and Shiann Ming Wu. 2018. “Development and Challenges of Sicial Enterprise in Taiwan: From the Perspective of

- Community Development.” Sustainability 10 doi:10.3390/su10061797.
- 丘昌泰. 2016. “台灣青年在社會企業與創新中的角色與挑戰” 『青年研究學報』 第19卷1期, 89-97.
- 丘昌泰·劉宜君. 2017. “臺灣社會企業法定位與問題之探討” 『社區發展季刊』 第160期, 36-51.
- 國家發展委員會. 2019. “地方創生國家戰略計畫” 國家發展委員會.
- 江明修·張浩榕. 2020. “從社會企業到社會創新之政策變遷分析多元流程模型的觀點” 『文官制度季刊』 第十二卷 第二期, 1-33.
- 法律網. 2017. 「社會企業發展條例」草案 https://www.lawbank.com.tw/news/NewsContent_print.aspx?NID=143844.00 (검색일: 2022.03.17.).
- 經濟部. 2014. “社會企業行動方案(103-105年)” <http://10156659.myku.tw/k/10156659/m/20151002205239.pdf> (검색일: 2022.03.17.)
- 經濟部. 2018. “社會創新行動方案(107-111年)”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r2b2Bw-b3AhWNC94KHbE_AaYQFnoECBAQAQ&url=https%3A%2F%2Fwww.ey.gov.tw%2FFile%2FCAFCE37E3CEAAB06%3FA%3DC&usg=AOvVaw0DTXQVy5S_4dzqd-dfxWG3 (검색일: 2022.03.17.).
- 經濟部中小企業處. 『社會創新大調查』 <https://si.taiwan.gov.tw/Files/Survey/2020/2020-社會創新大調查報告書.pdf> (검색일: 2022.04.20.).
- 蔡志揚. 2015. “社會企業立法之基本議題析探” 『全國律師』 第19卷第9期, 84-90.
- 詹昭全. 2020. “社會企業法制化才能提升影響力與公信力”. 風傳媒 <https://www.storm.mg/article/3158462?mode=whole> (검색일: 2022.04.10.).
- 陳健民·阮耀后·沢野々垣麻由美. 2013. “中国と香港における社会的企業の発展”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 第99号, 249-266.
- 陳隆輝·薛昭義·黃子明. 2018. “社會企業商業模式關鍵成功因素之研究” 『中山管理評論』 第26卷三期, 381-414.



Abstract

Taiwan's Social Economic Policy: Uninstitutionalized Social Innovation links Youth, Employment, and Locality

Dae-yeob Yoon
Daejeon University, Korea

How is Taiwan, which shares the institutional heritage of a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crises such as population reduction, local annihilation, and youth unemployment, implemented social economic policy? This study analyzes Taiwan's uninstitutionalized social innovation policy, which is being promoted by flexibly connecting youth unemployment, regional regeneration, and social innovation, from a theoret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Taiwan's social economic policy has comparative implications in three aspects. Taiwan, along with Korea and Japan, shares the institutional legacy of the developmental state of state-led economic growth. In addition, low fertility,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jobless growth and youth unemployment, asymmetric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local extinction are also crises shared by Korea, Japan and Taiwan. For this reason, since the 2000s,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promoting social economy strategies that foster companies that create social values according to profit motives. However, unlike Korea and Japan, Taiwan's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are characterized by 'non-institutional social innovation' in whic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institutionalized. This study explains that Taiwan's economic structure, centered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a variable of the 'non-institutional social economy' and analyzes the impact on overcoming social structural crises such as youth unemployment and start-up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ey Words: Taiwan's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social innovation, developmental state, social crisis]

논문접수일: 2023년 3월 13일

논문수정일: 2023년 4월 14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2일

제1저자(주저자): 윤대엽(尹大燾)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비교정치경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게이오대(2010), 대만국립정치대 국제관계연구소(2011), 북경대 국제관계학원(2014-2015)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고 대전대 군사학과 및 PPE(정치·경제·철학) 전공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경쟁적 상호의존의 제도화: 일중의 경제안보전략과 상호의존의 패러독스 (2022)," "트럼프-바이든 시기 미중경쟁: 탈동조화의 경제안보전략과 중간국가의 부상(2022)," "아베정치와 북일 관계: 납치문제의 정치화, 북핵위협 의 안보화 (2021)" 등이 있다(solon602@gmail.com).